

■우리당 국회 통의통위위원장 김 원 응 의원

與 ‘개헌추진위’ 출범... 바빠진 개헌 논의

■ 현장과 시각 ■

# “與 지도부 자기희생 필요 반한나라 대통합해야”

열린우리당 소속 김원응 국회 통의통위 위원장은 16일 “이번 대선은 반한 나라당, 반수구 세력이 단일대오를 형성할 수 있는지가 승리의 관건이다”며 반한나라당 세력의 대통합을 대선 승리의 열쇠로 꼽았다.



“통합신당 몸집 불려야 순혈주의 노선 고집 안돼”

합신당은 과도한 노선 순혈주의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지금 열린우리당이 부족한 것은 지도부의 자기 희생”이라며 “나는 무엇이 되느냐에 관심이 없고 장렬히 싸우다 쓰러져 후배들이 나를 점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나아가 “막상 선거전이 치열해져 논쟁과 토론이 진행되면 이념 박 전 시장이 지지

3선인 김 위원장은 이날 광주일보를 방문한 자리에서 “통합신당을 지역주의 정당으로 단순화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건 전 총리의 대선 불출마 선언과 관련, 김 위원장은 “통합신당은 국민신당도 포함하는 등 몸집을 불려야 하는데 의견을 넓히는 한 파트가 무너진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며 “통

일 1위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며 “여권에서 선거전략상 한나라당이 후보를 낸 이후인 7~8월에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6일 오전 영등포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대 준비위원회에서 원혜영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책임정치’ 중지 모아라

시민사회단체 합동토론회...개헌안·관철 전략 의견교환

열린우리당은 16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개헌 공론화를 추진할 당내 기구인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헌법개정추진위원회’(개헌추진위·위원장 유재건 의원)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또 17일에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모임인 ‘처음처럼’과 ‘참여자치 21’ 공동 주최로 개헌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헌 추진을 위한 열린우리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6일 공식 출범한 열린우리당 개헌추진위는 김영춘·임종석 의원이 부위원장을, 민병두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강기정·김현미·문

병호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개헌추진위는 산하에 홍보와 연구 등 2개 분과를 설치하고 매주 화요일 정례회의를 열어 개헌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과 관철 전략, 다른 정당과의 연대 방안, 국민대토론회 및 권역별 토론회 개최 등 대국민 홍보 방안, 당원교육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 의원은 첫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의 내용과 관철 전략 뿐만 아니라 차체에 국민투표법의 개정도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민병두, 임종석, 윤호중, 최재

성, 강기정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모임 ‘처음처럼’은 17일 오전 10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병두 의원이 발제를 한 뒤 강기정 의원, 김호립 광주YMCA 기조실장, 민병로 전남대 교수, 조정관 전남대 교수, 천성권 광주대 교수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또 이후에는 토론회 참가자들의 자유토론도 벌어질 예정이다. 개헌을 둘러싼 갖가지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기약없는 기업도시 중국출자



홍행기

사회2부 차장

무안기업도시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중국 측의 출자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결국 해를 넘겼다. 무안군 등 관련 당국에 따르면 중국기업은 해외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중국 정부(국가발전 계획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라고 한다.

물론 중국 측에선 무려 8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만큼 신중하고 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은 있지만, 문제는 무안군과 무안기업도시개발(주) 등의 무안기업도시 조성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들의 대응 수준이다.

무안군 등은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중국 정부의 출자승인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계속해왔다. “출자금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만큼 중국 정부 승인만 이뤄지면 곧바로 돈이 들어온다. 중국 현지를 방문해보면 광하그룹 등 중국 기업 측의 출자 약속이 확고한 것 같다”는 등의 긍정적인 발언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16일 현재까지도 중국 정부는 출자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실제로 무안군을 비롯 중국 측과 접촉을 하고 있는 기관에 물어보면 “중국기업 측에 하루빨리 출자를 해주도록 촉구는 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국 기업 측을 재촉하고는 있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결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무안군은 “기존의 기업 외에 또 다른 중국 기업이 무안기업도시에 참여키로 하는 바람에 전체 계획이 바뀌면서 덩달아 중국 정부의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고 이유를 대고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출자승인을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안기업도시 조성예정지 1천214만 평 가운데 국내 투자자가 개발하는 1단계 부지 526만 평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30일 건설교통부에 ‘기업도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승인신청 서류가 접수됐다. 사실상 1단계 개발이 시작된 셈이다. 그러나 중국기업 측이 출자하려는 2단계 부지의 개발은 기약이 없는 상태다.

무안기업도시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발전을 소망하는 지역민을 위해서, 이제라도 중국 측의 출자의지를 재확인하고 중국 정부의 출자승인 가능성을 분석,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비장의 대책’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이달 말이면 중국 정부의 출자승인이 나올 것”이라는 무안군 측의 답변이 이번엔 맞아떨어지지 않길 바란다. /redplane@kwangju.co.kr

# 광주북구의회 지자체 재정정상화 촉구 결의안

광주 북구의회는 16일 확정적인 재정분담정책을 개선해달라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소속 의원 20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북구의회는 결의문에서 “사회복지 예산의 재정분담이 확실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자체가 예산부족으로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까 우려된

다”며 “사회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복지특별교부세’를 신설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또 구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부세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35년 전통의 **비교당** 민약방이 연구 개발한 **장생·무독 오가미 식용**

장생식품 TEL: 062-385-3303 362-6900

**시몬스침대 광주 금남로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소리없는 편안함

이제 침대를 바꾸면 행복이 온다고 믿으셨나요? **OPEN**

시몬스 매트리스, 베개, 침대, 소파, 테이블 등 다양한 제품 소개

강력한 노르말거시 특수비법으로 통산부터 중3과정까지 12개월 완성!!

**이제는 수학도 논술시대!!**

문제만 풀고 답만 주는 수학공부 절대 사치지 마라!

“수학을 못하는 것은 100% 선생님의 책임!”

수학명사 최영석

062-376-3663 062-574-4422